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 '시동'…미디어월은 철거

복원추진단 사무실 전일빌딩 이전
505억 투입 8월 착공·2025년 개관
본관·상무관·회의실 등 6개 동 복원
전시 콘텐츠 구상도 마무리 단계

옛 전남도청 전경. 정면에 보이는 건물은 왼쪽부터 도청 회의실·본관·별관이며, 그 뒤편에는 경찰국 민원실과 본관이 세워져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추진단(복원추진단)이 오는 8월 복원 공사 착공을 앞두고 본격적인 공사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

복원추진단은 다음달 6일 옛 전남도청 별관에 있던 사무실을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 4층으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옛 전남도청 별관 또한 공사 부지에 포함돼 있으므로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광주시 파견직원, 군·경 관계자 등 복원추진단원 25명은 오는 2025년 12월까지 전일빌딩에 머무르며 공사를 진두지휘할 계획이다.

복원 공사도 전반적인 윤곽이 잡혔다.

총사업비는 지난 5월 15일자로 505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계획했던 255억원에 비해 98% 증가한 금액으로, 타당성 재조사 결과와 물가상승분, 감리비 인상분 등이 반영됐다.

복원추진단은 다음달 말까지 공사 업체를 선정하고 오는 8월 초 착공에 들어가, 24개월 동안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복원 대상은 옛 전남도청 본관·별관, 도청 회의실, 상무관, 경찰국 본관·민원실 등 6개 동이다. 이 중 도청 별관과 경찰국 본관은 100% 원형보존이 아닌 '제한 복원'을 하기로 했다.

도청 별관의 경우 ACC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건물 일부(건물 좌측 24m 공간)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문화전당 출입구를 만들었다. 복원추진단은 이 출입구를 그대로 두고 별관 3~4층만 부분 복원해 'n'자 형태로 건물을 복원할 방침이다.

경찰국 본관은 노후화가 심해 ACC 리모델링 과정에서 건물 내 곳곳에 철골 구조물을 덧대고, 이에 맞춰 층고를 낮췄다. 이들 구조물을 제거·변형할 경우 건물의 구조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어 기존 구조체를 유지하기로 했다.

도청 본관과 경찰국 본관 사이에 만들어진 방문자센터, 경찰국 본관 뒷면에 조성된 미디어월은 기존에 없던 시설물로 모두 철거하기로 했다.

이 중 철거·존치 논란이 크게 일었던 미디어월은 철거 후 다른 위치로 이전할 방침이다. ACC 관계자에 따르면 미디어월 공식 철거는 내년 하반기에 이뤄질 예정이며, 이전 위치는 올해 말께 결정할 전망이다.

전시 콘텐츠에 대한 구상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오는 12월까지 각 공간별로 어떤 전시 콘텐츠를 넣을지 세부 구현안을 마련하고 설치 용역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전시콘텐츠 제작 사업에는 110억원이 투입되며,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상황을 실물 또는 가상 전시 콘텐츠로 구현할 계획이다. 현재는 5·18 관련 기관으로부터 모은 5·18 서사와 사진, 영상, 구술 등 자료를 분석·검증하는 단계다.

복원추진단은 오는 2025년 하반기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관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5·18 당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실감나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나아가 관람객이 두번, 세번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복원 공사가 잘 마무리되고 5·18민주화운동의 뜻을 살리는 상징적인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 반대" 고수

양금덕 할머니·이춘식 할아버지, 시민단체 만나 입장 재확인

양금덕(오른쪽에서 두번째) 할머니가 20일 광주시 서구 자택 앞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배상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가 시민단체와의 만남에서 "정부가 제시한 방식인 제3자 대위변제안을 통한 배상금을 한푼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20일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민단체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박석운 공동대표가 양 할머니와 이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

이번 방문은 그동안 건강이 좋지않아 병원에 입원해 있던 양 할머니가 퇴원을 한 뒤 건강을 회복했다는 소식에 안부를 살피기 위해 이뤄졌다.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과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순천 송광사의 시경스님도 동행했다.

박 대표가 "할머니, 정부가 주는 돈 안 받겠다는 입장 지금도 똑같으세요"라고 묻자 양 할머니는 "네 그런 돈 필요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할머니는 "정부가 그런식으로 주는 돈은 더러운 돈인데 뭣 하러 받느냐. 그 돈이 아니라도 나는 먹고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 할머니는 이어 "100살까지 오래오래 살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앞잡이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광주시 광산구에 사는 이춘식 할아버지를 찾았다. 이 할아버지는 "대통령이 국민 눈치는 안 보고 일본 눈치만 본다"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표는 "어르신들께서는 버티고 계시는데 보답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저희가 국민 정성을 모으려고 한다. 그 말씀 드리려고 찾아봤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가 소송비 부담하는 규정 바꿔라"

정의당·여성인권단체 촉구

정의당 광주시·전남도당과 여성인권단체가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무규정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0일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가 예고한 소송사무처리 규정 개정 훈령(안)으로는 남도학숙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개정 훈령(안)은 남도학숙이 성희롱 피해자에게 일부 소송 비용을 청구하자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령에는 '공익소송의 경우 소송비용 회수를 예외로 둔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부칙 때문에 정작 남도학숙 피해자는 구제받지 못한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전남도와 광주시는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한 개정안을 만들어 2차 가해와 다름없는 남도학숙의 소송비용 청구 소송을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도학숙은 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지역 출신 학생들을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기숙 시설이다.

피해자는 2014년 남도학숙에 근로자로 입사 후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발생했다고 문제를 제기해, 2016년에 국가인권위로부터 성희롱 사실을 인정받았다.

이를 근거로 성희롱과 2차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했고 장기간 소송 끝에 지난해 8월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판결에서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남도학숙 측은 '2차 피해 기각' 부분과 관련해 일부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1년간 여교사 치마 속 몰카 고교생 집행유예 2년 선고

1년여 동안 휴대전화로 여교사를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8단독(부장판사 이광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면서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시 광산구 한 고교 재학중인 A군은 지난해 여름께 교내 영어전용교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18회에 걸쳐 여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1년 넘게 범행을 이어오다 다른 여교사를 상대로 몰래 촬영하다 발각됐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한 결과 150여건의 불법 촬영물을 확인했다. 다만 이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병호 기자 jusbh@